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 대한민국 대청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(02-2100-2620)	담 당 자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21)
	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 병 칠(02-3145-7120)		윤 동 진 팀 장 (02-3145-7147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노 영 후 팀 장 (02-3145-8050)
	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박 상 원(02-3145-8350)		김 범 준 팀 장 (02-3145-8356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김 경 수 팀 장 (02-3145-7455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(02-3145-6770)		이 건 필 팀 장 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(02-3145-7550)		문 재 희 팀 장 (02-3145-7552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종(02-3145-8070)		박 현 섭 팀 장 (02-3145-8072)
	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(02-3705-5050)		여 인 채 부 장 (02-3705-5704)
	생명보험협회 상무 신 영 선(02-2262-6621)		조 성 준 부 장 (02-2262-6689)
	손해보험협회 상무 서 영 종(02-3702-8580)		권 병 근 부 장 (02-3702-8571)
	여신금융협회 상무 이 태 운(02-2011-0710) 배 종 균(02-2011-0602)		김효석 부 장(02-2011-0743) 이경원 부 장(02-2011-0742)
	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 병 주(02-397-8602)		성 용 욱 부 장 (02-397-8640)
	신용정보협회 본부장 기 경 민(02-3775-3543)		최 영 삼 팀 장 (02-3775-2861)
	한국신용정보원 상무 박 배 철(02-3705-5808)		조 만 식 부 장 (02-3705-5917)

제 목 :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논의 결과

1 간담회 개요

□ '21.8.11일 8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주요 협회장, 신용정보원장,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(일시/장소) '21.8.11일(수) 08:00~09:00 / 뱅커스클럽
 (참석대상) [금융위] 금융위원장, 금융혁신기획단장 [금감원] 수석부원장
 [금융권] 은행연합회장, 생명보험협회장, 손해보험협회장, 여신금융협회장,
 저축은행중앙회장, 신용정보협회장, 한국신용정보원장

※ 코로나19 4단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

2 주요 논의내용

-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, 만기연장 조치 등과 함께,
 - 신용평가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도 최소화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
- 금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도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.
 - 개인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취약 채무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추진되었으나,
 - 일부 만기연장, 신용평가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미반영 등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-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
 -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,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
 -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, 금융 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.
 - 이는 위기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,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.
 -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,
 -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.
 -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,
 -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,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

- 금융권 참석자들은 위원장님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면서,
 - 금융권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.

3 간담회 결과

-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 - ①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고,
 - ※ 연체이력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 →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,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
 - ②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,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·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.
-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,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.

※ 금융권은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권 합동으로 8.12일 발표할 예정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<small>합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